

직장인 10명 중 4명 “월급 밀려봐”...못 따진 경우도 41.4%

직장갑질119, 추석 전 직장인 1천명 설문
기본급 30.2%, 퇴직금 28.1%, 수당 27.8%
비정규직·생산직, 정규·사무직보다 더 밀려
응답자 3분의 2 “한국 사회 임금체불 심각”
“임금 지급은 사용자 의무...근본적 대책을”

추석을 앞두고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임금이 밀려본 적이 있고, 변변히 회사에 따지지도 못한 채 속앓이를 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24일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임금체불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43.7%에 달했다.
 임금체불 경험은 일터의 약자인 비정규직(49.0%)과 생산직(51.5%)이 정규직(40.2%)

과 사무직(39.8%)보다 10%포인트 가량 높게 나타났다.
 체불 임금을 종류별로 보면 기본급이 30.2%로 가장 많았고, 이어 퇴직금 28.1%,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 27.8%, 기타수당 24.5%, 연차수당 23.2% 등 순이었다.
 특히 고용형태와 직업에 따라 임금체불 경험 정도에 차이를 보였다.
 비정규직은 연차수당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정규직보다 체불 경험이 많았고, 특히 기본급이 밀렸다는 응답이 34.8%로 정규직

(27.2%)을 7%포인트 가량 상회했다.
 생산직도 급여가 밀려봤다는 응답이 기본급 37.7%,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 40.2%, 연차수당 29.9%, 퇴직금 31.9% 등으로 평균 30~40%대를 오르내렸다.
 회사가 돈을 안 줄 때 대응을 물었을 때 ‘회사에 지급을 요청했다’는 응답은 59.5%, ‘고용노동부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련기관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24.3%였다.
 하지만 ‘회사를 그만뒀다’(22.4%), ‘모르는 척 했다’(19.0%) 등 대응을 포기했다는 응답도 함께 41.4%로 높았다.
 임금 체불에 대응하지 않았다는 응답자 170명에게 이유를 묻자 ‘대응을 해도 체불된 임금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가 43.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 30.6%, ‘체불된 임금 금액이 적어서’ 15.3%, ‘시간이 없어서’ 8.8% 순이었다.
 한국 사회의 임금 체불 심각성에 대한 질문에는 ‘심각하다’는 응답이 66.0%로, ‘심각

하지 않다’ 34.0%의 2배에 가깝게 나왔다.
 특히 응답자 중 ‘5인 미만 사업장’(68.1%),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70.1%) 종사자일수록 임금 체불 문제를 심각하게 봤다.
 원인으로는 ‘임금 체불 사업주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아서’가 69.9%, ‘사업주가 지불 능력이 없어서’가 23.6%였다.
 제도적 해법으로는 신고 뒤 노동자가 사측과 합의해도 사업주를 처벌하는 ‘반의사불벌죄 폐지’가 26.7%로 가장 많았고, ▲소멸시효 3~5년 연장(18.9%) ▲체불임금 지연이자제 모두 적용(14.2%) ▲대지급금 제도 확대(13.3%)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강화(9.9%) ▲포괄임금제 폐지(8.5%)가 뒤를 이었다.
 직장갑질119는 올해의 경우 이달 20일까지 전체 제보 메일 1358건 중 임금 관련 문의가 19.7%(268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회사 대표가 회사 사정으로 임금 지급이 어렵다며 미지급금을 두 차례 나눠 주

고, 몇 달 뒤 같은 설명이 반복돼 결국 임금 체불 진정을 넣고 사직서를 냈다는 한 노동자의 제보가 접수되기도 했다.
 또다른 직장인은 정식 출근(9시)보다 30분 앞당긴 오전 8시30분에 출근해 추가 근무를 강요했다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자 8시30분 출근 지시를 지켰는지 조사해 징계를 검토한다는 제보를 직장갑질119에 보냈다.
 직장갑질119 조주희 노무사는 “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유지하는 필수적 수단”이라며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갑질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 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서선욱기자



청명한 가을 날씨 청명한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는 24일 서울 반포 한강공원에서 한 축제에 참석한 벌론아티스트가 어린이들에게 하트 풍선을 선물하고 있다.

이재명 곧 구속 심판대...무엇으로 다투나

백현동·위증교사·대북송금 관련 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주 구속 심판대에 선다. 이 대표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이 대표와 검찰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결과는 심문 당일 밤, 늦어도 다음 날 새벽 나올 예정이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위증교사 의혹, 대북송금 의혹 등 크게 세 가지다.
 백현동 의혹은 이 대표가 자신의 성남시장 선거 등을 도운 측근 김보씨의 청탁을 받고 각종 인허가 특혜를 제공, 민간업자에게 1356억 원대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엔 200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내용이다.
 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서 이 대표는 백현동 사업 브로커 김씨가 얻은 막대한 이익을 고리로 김씨의 측근에게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사실 공표 재판에서 위증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대북송금 의혹으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2020년 사이 스마트폰 사업 지원 비용과 이 대표 방북 비용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내게 한 혐의가 있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대표 혐의의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대표 영장 청구서에서 백현동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을 각각 ‘권력형 지역 토착 비리 사건’, ‘선출직 공직자와 부패 기업인 간의 정경유착 범죄’로 규정했다.
 배임, 위증교사, 뇌물 등 이 대표의 혐의를 종합하면 징역 11년~36년6개월 이하의 징역 혹은 무기징역이 가능하다고 계산했는데, 이런 양형 계산에 따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도주 우려까지 있다고 검찰은 우려한다.
 검찰은 증거인멸과 관련해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및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의 위증교사 의혹, 대북송금 관련 이 전 부지사 회유 시도 및 재판기록 유출 의혹 등을 영장 청구서에서 언급했다. 이미 증거인멸이 현실화됐다는 것이다.
 반면 이 대표는 백현동 의혹에 대해선 배임의 동기가 없으며,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은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불가피하게 허가한 것이라 입장이다.
 뉴스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